

두쫘꾸 중고거래 확산...식품안전 사각지대 우려

〈두바이 쏘독쿠키〉

무허가 개인 간 거래...최대 1만원에 재판매되기도 소비기한 등 필수정보 미표시...“식품위생법 위반”

인기 디저트 ‘두바이 쏘독쿠키(두쫘꾸)’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무허가로 재판매되며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인 간 거래 특성상 소비기한과 보관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관련 법 규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철저한 식품위생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두쫘꾸 바로 거래 가능”, “선물 받은 두쫘꾸 판매” 등의 게시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판매 가격은 개당 4000원 선에서 형성돼 있으며, 일부는 1

만원 안팎으로 정가를 웃도는 사례도 확인됐다. 두쫘꾸는 피스타치오 스프레드에 중등식 면 ‘카다이프’를 더한 뒤 초콜릿과 마시멜로로 감싼 디저트로, 최근 SNS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며 제과점과 카페에서는 이른바 ‘오픈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MZ세대를 중심으로 구매 인증 사진이 확산되면서 수요가 급증했고, 이 틈을 타 중고거래 시장으로까지 판매가 번지고 있는 것이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두쫘꾸를 사고



당근마켓에 등록된 두바이 쏘독 쿠키 판매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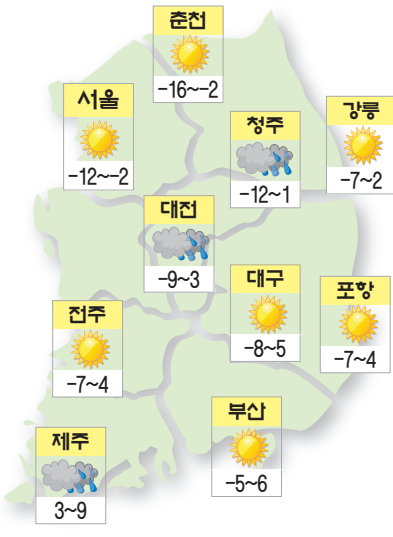
팔겠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 한 판매자는 “두쫘꾸 7개를 선물 받았는데 취향이 아니라 개당 5500원에 판매한다”고 게시했고, 나주의 한 판매자

는 “너무 많이 사 남은 수량을 정가에 넘긴다”며 구매자를 찾고 있었다. 심지어 두쫘꾸를 만들고 남은 원재료인 카다이프, 초콜릿, 탈지분유 등 재료를 판매한다는 사례도 등장했다. 소비자들은 불안함을 느끼면서도 거래에 나서는 모습이다. 김모씨(36)는 “추운 날씨에 오픈런을 할 자신이 없어 중고거래로 구매했다”며 “대면 거래라 판매자가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 믿었지만 마음 한 편으로 찝찝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거래 과정에서 소비기한, 개봉 여부, 보관 상태 등 필수 정보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당근마켓은 최근 가공식품 카테고리 선택 시 소비기한 입력을 의무화했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 ‘기타 물품’ 등 다른 분

류로 게시글을 올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모든 식품은 최소 판매 단위 포장지에 제품명, 소비기한, 원재료명 등을 표시해야 하며, 영업신고 없이 개인이 식품을 재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포장된 완제품을 낱개로 나눠 파는 소분 판매 역시 처벌 대상이다. 특히 소비기한이 지났거나 개봉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식품은 세균 증식과 변질 위험이 크고, 사고가 발생해도 피해 보상이 어렵다. 지자체 관계자는 “무허가·무표시 식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보관·취급 여부와 소비기한이 명확하지 않은 중고 식품 거래는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	예보	07:38	달달	10:01
☁️	예보	17:51	달달	22:22



광주	☁️	-4~5
목포	☁️	-2~5
여수	☁️	-4~6
순천	☁️	-5~5
구례	☁️	-6~5
광주	☁️	-3~6
진남	☁️	-2~7
진남	☁️	2~7
고흥	☁️	-5~7
진도	☁️	-1~6

목포	일출(고)	04:49 / 17:18
여수	일출(저)	10:06 / 22:35
여수	일출(고)	12:00 / --:--
여수	일출(저)	05:31 / 18:06

시교육청 ‘교육가족 대토론회’ 오늘 교육통합 방안 의견 청취

광주시교육청이 교육 통합과 관련한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광주교육가족 대토론회’를 연다. 광주시교육청은 23일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광주교육가족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와 연계된 교육 통합 방안에 대해 교육가족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을 비롯해 광주민주진보교육감후보시민공천위원회(김용태·오경미·정성홍 대표), 교원단체, 공무원노조, 공무원노동조합, 학부모, 교장 및 행정실장 등 8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토론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자유로운 질의·응답을 통해 교육 통합에 대한 교육가족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김은수 기자 joinus@g



“우리 졸업했어요” 22일 오전 광주 서구 뽕촌동 상일여자고등학교 졸업식에서 학생들이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기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이상의 함평군수 2심도 무죄 법원 “뇌물 인식 단정 못해”

‘양북비 대납 뇌물수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의 함평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연선주·김대현·김유진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의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군수는 2020년 관공공사 수의계약 관련 청탁을 받고 건설업자 A씨로부터 888만원 상당의 수제양복 구매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군수가 양복비 대납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양복을 맞춰 입은 시점은 뇌물 공여자들이 군수실을 방문해 수의계약 청탁을 하기 전이다”며 “뇌물을 수수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

같은 법 다른 현장...광주 자치구 재난상황실 ‘제각각’

24시간 운영 의무인데 자치구별 준비 상황 달라 동·광산 가동, 북 준비중, 서·남 제도 정비 단계

광주 5개 자치구의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준비 속도와 운영 수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따라 법적 의무가 부과됐지만, 자치구별 인력·예산 여건에 따라 준비 속도가 엇갈리고 있어서다. 재난 대응 능력의 지역 간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균형 있는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광주 동구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따라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재난안전상황실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활용해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긴급재난문자 발송과 상황 전파, 초동 대응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법적 의무’와 ‘행정 여력’ 사이의 간극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동구는 가장 먼저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들어갔다.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억6000만원을 투입해 상황실을 구축하고, 재난안전통신망(PS-LTE)과 재난에·경보시스템을 연계한 실시간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전담 인력 3명은 청사 5층

상황실에서 CCTV와 각종 재난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순환 근무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광산구 역시 24시간 대응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운영 규정을 전부 개정하고 특별교부세 3억원을 투입해 ‘365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AI플랫폼’을 구축했다. 이달부터 전담 인력 3명이 청사 4층 재난안전종합상황실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향후 전담 인력을 6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북구는 현재 과도기적 단계다. 다음 달 완공 예정인 신관에 재난종합상황실을 구축하고, 재난전담주무관 3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3~4월부터는 재난전담 인력이 24시간 근무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지만,

현재는 주간에는 안전총괄과, 야간과 공휴일에는 당직실 직원들이 재난 상황을 병행 관리하고 있다. 서구와 남구는 제도 정비 단계에 머물러 있다. 서구는 상반기 중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을 통해 재난상황실 전담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재난안전상황실은 상황 점수와 보고를 맡고, 기존 당직실은 현장 대응을 담당하는 이원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남구 역시 상황실 구축과 전담 요원 배치, 관련 조례 개정 등을 놓고 검토를 진행 중이다. 자치구별로 상황실 운영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조직 구조 차이가 작용하고 있어서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재난안전상황실은 법적으로 반드시 갖춰야 하는 시설이지만, 실제 24시간 전담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 총원과 예산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담배공초 부주의에 하르륵

만년필 ○·한밤중 전남 순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담배공초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서. 22일 순천소방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7시45분 순천시 조례동 15층 규모의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소방대원 42명, 소방장비 14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21분 만인 오후 8시6분 불길을 잡았다. 이 불로 세대 내부 일부가 소실되고 인근 차량 2대가 부분 파손돼 소방 추산 153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 불이 나자 주민들은 곧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소방당국은 베란다에 버려진 담배공초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순천소방 관계자는 “일상 속 사소한 부주의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담배공초는 작은 쓰레기통이나 공사장 폐기물, 길가의 낙엽 등 어떤 환경에서도 쉽게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 송태영 기자 sty1235@순천=박철식 기자 2556pk@

광주지방변호사회, 2025년 사법경찰 평가

검정 수사권 조정에도 사법경찰관 태도는 ‘글썸’

검정 수사권 조정에도 일부 사법경찰관의 중립성 상실·적법 절차 미준수 등의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22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변호사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사법경찰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수사권 조정으로 역할이 증대해진 사법경찰관들의 공정성, 적법 절차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개업 변호사 173명이 참여해 1522건을 분

석했다. 광주·전남지역 경찰관서는 평균 80.0점을 받았다. 평가 결과 우수관서로는 광주 관산경찰서와 무안경찰서로 각각 평균 83.2점, 88.8점을 받았다. 반면 광주 동부경찰서와 광양경찰서는 각각 평균 77.1점, 74.5점을 받아 하위경찰관서로 선정됐다. 변호사회는 일정 횟수 이상의 평가를 받은 개별 사법경찰관 중 평균 점수를 기

준으로 상위 10인을 우수 사법경찰관으로 뽑았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김세훈 수사관, 광주 서부경찰서 김영광·김후순·임태인·이다영 수사관, 광주 관산경찰서 이윤남·박병용·김성은 수사관, 광주 북부경찰서 고석룡 수사관, 광주 동부경찰서 강항 수사관 등이다. 이들은 적법절차 준수와 직무능력 영역의 점수가 특히 높았다. 특히 친절한

태도로 진술을 경청해 조서를 충실하게 작성하고,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해 객관성을 유지하며 수사를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위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선정하지 않지만 다양한 부정적 사례를 공개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일부 수사관은 범죄단체와 무관한 사건에도 의뢰인에게 ‘너 강매잖아’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인격적 편견이 의심되는 언행을 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전에 사과 의사를 묻는 등 예단적 행위, 수사관 기피 심정을 무시하거나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도 사건을 반복 송치한 행위, 증거 수집 책임을 고소인 측에 요구하며 책임을 전가한다는 경험담이 제기됐다. 예정된 조사일에 출석했는데 수사관의 휴가를 이유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반말과 모욕적 표현으로 피의자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었다.

인격적 편견·고지외무 미준수·증거수집 소홀 지적 우수 사법경찰관 10인 선정...부정사례 개선 요청도

피해자 국선변호인이 수사 진행 상황을 문의하자 대놓고 불쾌감을 드러내는 수사관도 있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수사의 첫 단계부터 공정하고 친절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적 평가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청하겠다”며 “공정하고 적법한 수사권 행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방변호사회는 26일 제79차 정기총회에서 우수 사법경찰로 선정된 사법경찰관 중 상위 3명을 초청해 ‘우수 사법경찰관 증서’와 부상을 수여한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